

Capital as Power

정 치 와 경 제 의 이 분 법 을 넘 어 서

권력 자본론

정치경제학은 몰당 무수당이 된다. 그가만이 처는 18세기식 기계적 세계관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질 수 없으며, 또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과도 모순 없이 합당스럽지 않다. —— 새로운 보편주의의 확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편주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질서, 질의, 조화 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욱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의 핵심 개념들을 그것이 전파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론과 영구를 다시 발명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낡은 정치경제학을 폐쇄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경제학을 건설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심슨 비클러, 조나단 닛잔 지음 | 홍기빈 옮김

삼인

이 책은 국제 정치에서 일상의 자잘한 구석까지 현대 세계의 삶의 진부를 포섭해오는 '자본'의 정체를 밝히면서, 자본이 축적되는 메카니즘의 논리를 정확하게 규명하려 한다. 이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이루어지는 지구적 규모의 자본 축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어떠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자본이 현대 세계의 신으로 등극한 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어째서 그러한 이론적 작업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저자들은 그것을 막아왔던 가장 근본적인 장애로 현대 사회과학에 뿌리깊게 자리한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을 지목하고,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에서 자본과 그 축적의 메카니즘을 해명하고 있다. 자본을 '생산성'이나 '효율성' 등에 기반한 '경제적 존재'로 정의하는 기존의 '경제학적' 자본 이론을 해체하고, '사회의 생산적 과정에 대한 지배 권력'으로서 자본을 정의하며 새로운 시도로 정치경제학을 만들어간다.

—「옮긴이의 말」 중에서

값 15,000원



ISBN 89-91097-04-9



심손 비클러(Shimshon Bichler)와 조나단 닛잔(Jonathan Nitzan)

비클러와 닛잔은 자본주의 연구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정치학'과 '경제학'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분야가 따로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전통적인 접근법도 거부하지만, 그 둘을 '연결' 시키려 하는 소위 이단적 접근이나 포스트모던 류의 정치경제학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 두 분야는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독립된'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학과 경제학을 분리시키는 그릇된 이분법의 가장 심한 폐해는 전체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사회변화의 과정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그 두 학문을 나누고 있는 장벽을 분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닛잔과 비클러는 자본은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적 권력 형태라고 보며 자본 축적은 그 권력 자체가 계속 '상품화' 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 새로운 틀을 통하여 이들은 겉보기에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군비 확장과 평화,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스태그플레이션, 하이테크와 기업 합병, 지구화와 국제적 분쟁,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불안정, 회계제도와 정보의 정치학, 지배계급 형성과 노동 재조직화, 종교 이념 및 광고, 정당과 제도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정들이 금융 시장의 투자가들에 의해 '할인' 되면서 자본의 축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비클러와 닛잔은 수십 년간 공동 작업을 하면서 이스라엘, 중동, 미국,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대한 책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지구적 이슈들에 집중하여 지구적 자본에 대한 저작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 The Bichler & Nitzan Archives (<http://www.bnarchives.net>) 에서 볼 수 있다.

조나단 닛잔은 캐나다에 살고 있으며 토론토의 요크 대학(York University)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심손 비클러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윤진이 홍기빈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외교학과에서 「칼 폴라니의 정치경제학: 19세기 국제 금본위제를 중심으로」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토론토 요크 대학 정치학과에서 일본 기업 소유구조 변화에 대한 지구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전통적 사회과학의 국내/국제와 정치/경제라는 두 이분법을 극복하는 지구적 정치경제학(global political economy) 이론 체계를 만드는 일과 동아시아에 남아 있는 냉전적 질서를 극복하고 평화 지향적인 진보적 사회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문제 등에 많은 관심이 있다. 저서로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한다』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마이클 레보위츠, 『자본론을 넘어서』와 칼 폴라니,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전세계적 자본주의인가』가 있다. 월간 「말」지에 진보 이념의 모색을 주제로 한 글들을 연재하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 등에 종종 국내외의 정치, 경제 문제들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 있다.

삼인의 책들

책은 말하는 나무, 단단하고 부드러운 생명이다.

예언자들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하바꾹 등 구약성서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특징과 발자취를 살피면서 그들이 행한 예언의 의미를 설파한 20세기 신학의 고전이다.

아브라함 J. 헤셀 | 이현주 옮김 | 784쪽 | 신국판양장 | 30,000원

성의 역사학 — 근대국가는 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제국주의가 낳은 긴장과 모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근현대 일본의 성·생식통제와 사회운동을 무산계급 여성의 입장에서 살펴본다.

후지에 유키 지음 | 김경자, 윤경원 옮김 | 475쪽 | 신국판양장 | 23,000원

홍군 VS 청군 — 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시아 패권쟁탈전

21세기 세계의 제국으로 군림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세력 관계가 정치, 경제, 외교의 영역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그 대립의 쟁점은 무엇인가? 그 틈새에서 정치, 경제적 생존을 모색해야 할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미래를 모색한다.

이장훈 지음 | 394쪽 | 신국판 | 13,000원

국민로부터의 탈퇴 — 국민국가, 진보, 개인

민족과 국가의 이익, 발전을 개인의 삶보다 우위에 놓는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주술에서 한국사회가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획일화·평균화된 '국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모색한다.

권혁범 지음 | 272쪽 | 신국판 | 9,500원 | (신국판양장 | 13,000원)

옮긴이 말

솔직히 고백하거니와, 이 책은 그다지 읽기 쉬운 책이 아니다. 또 "지구화와 국제 자본이 지구와 인간을 망치고 있다"는 뻔한 상식을 독자들의 마음속에 그저 한 번 더 확인해주는 책도 아니다. 대신 끊임없이 골치 아픈 수수께끼들을 던지면서 독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따져볼 것을 강요하는 아주 불편한 책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학술 서적'이 되어 관련 분야의 소수 연구자들에게만 읽히게 되는 것은 결코 이 책을 쓴 저자들이나 번역한 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지구적 규모의 자본 축적으로 온 세계가 근본적 구조 변동을 겪고 있는 21세기의 벽두에서, '자본'의 성격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이해될 것을 감히 요구하는, '대중 서적'으로 쓰여지고 또 옮겨졌다.

어째서 이런 골치 아픈 책과 씨름할 것을 요구하는가? 1990년대 말 이후 사회과학 출판계에서는 '지구화'를 다루는 '비판적인' 시각의 서적들이 큰 시장을 확보해 이제는 큰 서점에 가면 아예 코너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책들은 선명하고 뚜렷한 메시지를 내걸고 독자들에게 곧바로 다가선다. 그런데 어째서 금융 이론, 경제학설사, 정치 철학 등 온갖 골치 아픈 분

아들만 골라서 총집합해 놓은 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 그래프 차트까지 수십 개 쏟아지는 이런 책을 읽어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납득(혹은 거부) 하는 것은, 물론 저자들이(적은 문이나 옮긴이도) 본문에서 해놓은 작업을 보고 난 뒤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이므로, 책의 초두에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격에 맞는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옮긴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고 싶은 말은 이미 필자들이 본문에서 훨씬 더 정연하고 충실하게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천학비재한 옮긴이가 무슨 말을 덧붙이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문의 험준한 산행을 떠나기에 앞서 함께 숨을 고르면서 잠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

'상식'에 대하여: 흡스봄이 20세기를 일컬어 붙였던 '극단의 시대'는 1990년대 초 공산 진영의 몰락으로 일단락이 된 듯 하다. 그 이후 현재까지의 시대는 아마 '상식의 시대'라고 불러도 좋을 듯 하다. 사람들은 20세기 내내 자유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적 민족주의와 같은 '정치 신학'에 이리 몰리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피해자로서 또 동시에 가해자로서 슬한 고통을 몸소 겪고 또 남에게 가한 바 있다. 이제 그런 비장한 선동조의 목소리로 개인, 계급, 민족의 영광을 장황하게 늘어놓고서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식의 담론에 사람들은 선뜻 움직이려 들지 않는다. '상식'적인 잣대를 넘어서는 이야기는 담론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상식의 시대'가 왔다.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에 발 맞추어 우리 사회에서도 1990년대 이후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모토를 앞세운 일군의 지식인들이 담론의 장을 상당히 메워가고 있는 듯 하다. 이제 민중, 자주, 해방 등의 거창한 개념을 꼭

깨어차지 않고서도 이런 저런 사회의 비상식과 몰이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 '상식으로 충분한가?'

첫째, '드러나지 않는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평화를 운운하면서 이라크의 석유와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이는 세계 최강대국, 영남 지역을 불모로 잡고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수구 세력, 도처에서 여성들을 주눅들게 하는 남성 우월주의 등을 모두 '상식'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하지만 상식이 현실 비판의 도구로 발동될 수 있는 경우는 위의 경우처럼 그 대상이 사람들 눈에 현저하게 드러난 경우만으로 제한된다. 또 그 비상식에 대해 분개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여야만 하고, 발언을 할 수 있을 만큼 담론 권력에 접근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대 학벌의 폐해는 지적하지만, 고졸이나 중졸로 인해 겪는 고통은 이야기되지 않는다. 인텔리 전문직 여성 문제는 성적 취향과 감성까지 시시콜콜 이야기되지만 빌딩 청소부 아줌마들의 기막힌 현실은 장애인 이야기와 비슷한 정도로 논의된다. 분신을 선택할 지경으로 몰린 노동자들의 고통도 그 '상식'은 "노사 관계란 복잡한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피해간다.

둘째, 그 '상식'이라는 것에서 단지 이런 저런 작태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사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일관된 적극적 내용이 도출될 수 있는가? 그러한 예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미국 혁명 전야에 토마스 페인이 저술했던 팜플렛 「상식」(Common Sense)은 미국 문제는 단순한 조세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이라는 것의 궁극적 의미와 닿아있음을 갈파하였고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이루기도 하였다. 씨이에스가 저술한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 또한 다수 대중들을 향해 새로운 사회질서의 필요성을 상식의 형태로 설파한다. 이후 수백 년간 사회적 삶의 원형을 제시한 시민혁명의

내용이 '상식'으로 나타났었던 것이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상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적극적인 내용까지 획득하고 있을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의 '상식'이라는 말은, 결국 입심 좋은 지식인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회현상을 도마에 올려 이리 저리 칼질을 하는 데에 동원되는 수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지구화 에 휘말려든 오늘의 세상은 숨가쁜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일상도 그 변화의 물결에 설 새 없이 휩쓸리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인지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상식'은 과연 이렇게 방향도 모르는 채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자본'에 대하여: 아마 이 '자본'이라는 말만큼 쓰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정반대의 가치 평가를 받는 말은 없을 것 같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야말로 인간 사회의 번영,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야말로 근대사회의 만악의 근원이라고 소리 높여 외친다. 그래서 한 쪽에서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자본을 축적하는 데에 최대한 좋은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좀더 더 많은 양의 자본이 국내 외에 걸쳐 넘쳐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인간과 자연을 황폐하게 만드는 첩경이며 그 공동체의 삶의 파괴는 물론 주권 조차 넘기는 노예로의 길이라고 외친다.

이렇게 대립되는 두 입장 모두 동의하는 분명한 진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 자본이라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삶 전반에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따라서 자본에 반대하는 자들은 전사회적으로 반자본 투쟁을 조직하자고 외치고

있으며, 자본을 찬양하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육, 문화, 정치, 예술 할 것 없이 전 사회를 자본 축적의 관점에서 '합리화'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구화' 시대에 들어 우리는 자본의 축적이 그 규모에서나 공간적 차원에 서나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가속화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 자본 축적의 가속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어렴풋하게나마 이미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째서 언제부터 비판적 사회 담론의 장에서 이 용어에 대한 토론과 문제 제기는 슬며시 빠지게 되었는가? 프랑스 1968년 혁명의 기수 카스토리아디스(Cornelius Castoriadis)는 1970년대 이후 서구의 소위 비판적 사회 담론이라는 것에서 "자유주의적인 정치 경제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과 모순들을 자본의 축적과 연결해 설명하려는 노력에 대해 그 비판적 지식인을 자칭하는 이들은 '경제주의 환원주의'라는 알쏭달쏭한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1980년대 한때 '정치경제학의 과잉'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 한국의 '사회 성격'이 종속적 축적의 주변부 자본주의나, 제국주의적 착취로 축적이 제약당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나, 낮은 생산력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나, 초과이윤 알파를 동반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나 하는 기가 질리도록 복잡한 정치경제학 논의가 꽃을 피웠다. 운동가나 사회과학자는 물론, 문인이건 예술가이건 각종 문화 잡지와 문학 계간지에 넘쳐나는 '국독자' '식반자' 같은 생경한 말들을 한두 마디 담지 않으면 비판적 지식인 행세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전지구적 규모의 자본 축적에 본격적으로 휘말려들기 시작한 1990년대, 그 많던 '자본 축적'의 논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그 '자본'이니 '축적'이니 하는 용어들이 특정 이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지레 느끼고 거리 유지하기로 한 것인가. 이 '상식의 시대'에 '합리적인 논자'로 여겨지려면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물론 이 '상식의 기수'들이 자본과 축적의 현실에 대해 항상 침묵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자본과 축적의 문제가 대중들의 '상식적 감수성'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불거지는 경우 바로 그 '상식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한에서는 가치없는 비판을 가한다. 서구 제도 언론들이 '반지구화 운동의 성전'으로 치켜세운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의 『상표는 이제 그만』(No Logo)은 사람들의 생활 세계를 광고와 소비주의로 포위해버린 대기업들의 행태를 1950년대 미국 소시민의 푸념 수준의 소박한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등의 저서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같은 곳에서는 곡물 유전자 변형 등과 같이 다국적 자본이 벌이는 온갖 유기적 행태를 고발하면서 '자본 = 남근(男根) = 제국주의'라는 기상천외한 '이론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과 축적에 대한 분석과 토론은 이제 대기업 초국적 기업의 갖가지 작태에 대한 고발과 폭로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 지구화의 현실에서 자본 그리고 축적의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수준에서 해명되어야 한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는 성경 구절을 떠올릴 만큼 우리의 삶은 지금 뿌리깊은 전환을 겪고 있다. 영어 실력을 위해 아이 혀바닥에 칼을 대는 주변부 천민들이 등장하고 있다. 생명 공학은 세계의 농업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유전자까지 송두리째 손을 댈 모양이다. 어떤 곳은 국가 기구 전체가 인민들과 토지를 볼모로 잡은 마피아 소굴로 변해버렸

다. 그리고 이 모든 북새통 속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장기적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설 새 없는 자본의 축적이다.

그래서 지금 자본과 축적에 대한 우리의 토론은 '상식적 비판'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눈에 잘 드러나지도 않고 또 매체에서 공론화되는 법도 없지만 이 지구적 규모의 자본 축적이 벌어지는 와중에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불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상식'으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대안적 사회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러한 과제를 위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자본 축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해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이다.

이것이 저자인 닷잔과 비클러가 이 책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본의 본질을 "사회적 관계를 재구조화하는 권력"(The power of social restructuring)으로 정의함으로써 그러한 작업에 도전하고 있다. 물론 자본, 권력, 사회의 구조 변화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기존의 급진적 정치 경제학자들이 많이 지적했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들은 권력 관계의 작동으로 사회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자본의 축적은 그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이론들—예를 들어 데이비드 고든(David Gordon) 등의 「축적의 사회적 구조」(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본이 바로 그 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권력이며 자본의 축적 과정은 사회 구조 변화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관점을 제시해 현재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 변화를 설명할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원 제목으로 쓰인 '권력 자본론'(Capital As Power)에 담긴 의도와 목적이다. 이러한 저자들의 시도는 사실상 경제학 혹은 정치경제학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반하는 획기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저자들은 국제 정치에서 일상의 자잘한 구석까지 현대 세계의 삶의 전부를 포섭해 오는 '자본'이라는 개념의 정체를 밝혀내고 또 자본이 축적되는 메카니즘의 논리를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그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이루어지는 지구적 규모의 자본 축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어떠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려고 한다. 자본이 현대 세계의 신으로 등극한 지 벌써 몇 세기가 되었건만 어째서 그러한 이론적 작업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저자들은 그것을 막아왔던 가장 근본적인 장애로 현대 사회과학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을 지목하고,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에서 자본과 그 축적의 메카니즘을 해명하고 있다. 자본을 '생산성'이나 '효율성' 등에 기반한 '경제적 존재'로서 정의하는 기존의 '경제학적' 자본 이론을 해체하고, "사회의 생산적 과정에 대한 지배 권력"으로서 자본을 정의하며 출발하는 새로운 정치경제학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자본은 항상 '생산성'과 같은 관념과 연결되어 연상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신고전과 경제학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도 만연해 있다. 물론 '자본=생산성'이라는 관념은 대단히 오래된 유서 깊은 것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역사가 브로델도 지적하듯이 이 '자본'이라는 말은 본래 "이윤을 낳으면서 스스로 증식하는 화폐"라는 의미의 말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근대 초기까지 유럽 사상을 지배했던 사고 방식은, "원래 불임일 수밖에 없는 무생물인 화폐가 새끼를 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이었고, 그 귀결은 "따라서 이윤이 나이지는 도둑질과 다름없는 부당한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푸코가 지적한대로 18세기에 들어 정치경제학은 '생산'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에피스테메의 일대 전환이 벌어진다. 18세기 중반 프랑스

의 중농주의자들(Physiocrats)은 진정한 '부'란 중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품의 부등가 교환을 통해 그저 더 많은 금화 은화를 축적하는 데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진정한 '잉여'가 창출되는 곳은 '생산과정'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정치경제학에 도입한 것이다. 이후 그 생산 과정과 잉여의 구체적 성격이 무엇이냐를 놓고 아담 스미스, 마르크스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도록 숱한 논쟁을 거쳐왔지만, "경제란 이 잉여를 낳는 사회의 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중농주의자들의 기본적 패러다임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한 가지 더 있다. 중농주의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제 영역은 감히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자연'(physis)의 법칙에 지배된다. 따라서 이 경제 영역은 사회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며 또 그렇게 다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몇 천년간 '부정한 도둑질'로 낙인 찍혀온 자본, 이윤, 이자 등은 이제 이렇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독립된 '경제'와 '생산'의 영역에 또이리를 틀면서 튼튼한 정당화의 논리를 얻게 된다. 이자와 이윤의 근원은 바로 그 생산 과정에서의 '잉여'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은 무슨 사일록 같은 자들의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그렇게 잉여를 낳도록 생산 과정에 '투자'(paid in advance)되는 돈인 만큼 여기에는 정당치 못하거나 떼떽치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 반대이다. 부의 진정한 근원이 사회적 생산과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에 있다면, 그것을 조직하는 원동력인 자본이야말로 사회를 먹여살리는 구세주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이렇게 '생산적인 존재'인 자본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많이 투자되도록 할 것인가에 모든 고민과 노력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 이 자본 축적의 극대화과 그를 통한 경제 성장의 확장 이야말로 고전파 경제학

전체의 핵심적인 과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컨대 첫째, 사회의 생산 과정과 그에 기반한 경제 영역은 사회와 정치에서 독립된 독자적 운동법칙으로 조직된다. 둘째, 자본과 이윤이란 그 생산 과정의 핵심적 존재로서 사회 전체의 풍요와 부는 그 축적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혁명기 전후의 경제 사상은 자본과 경제에 대한 현대인들의 사고 방식을 여전히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다. 해외 자본의 유입이야말로 생산성 향상과 부를 가져오는 첩경이라는 사고방식은 현실적인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지구화 시대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매체의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강단의 경제학자들의 입에도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 그리고 '자본은 사회의 구세주이다'라는 사고 방식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르크스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또한 19세기 고전파의 패러다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에 그 두 가지 사고방식을 파괴하려는 마르크스주의의 시도는 눈부신 성과만큼 또 그 사고방식에 발목이 잡힌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자본주의 경제는 물론 정치나 사회 영역과 긴밀히 '연결'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고유의 '운동법칙'을 갖는다는 점에서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은 더욱 강화되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또 자본의 본질이 "노동자들에게서 소외되고 생산 설비로서 재투자되어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죽은 노동의 축적"라는 것을 폭로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결국 '자본=생산성'이라는 관념을 더욱 강화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은 '사회적 현상을 생산 과정에서의 경제 논리로 환원해버리고 만다'는 비판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의 경우 '생산력 물신주의'의 비판에 휩싸이고 만다. 이렇게 19세기 정치경제학의 패러다임에서 찍혀나온 신고전파 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공히

깔려있는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한 '자본'의 이론을 검토하여 그 모순을 밝혀내는 것이 이 책 1부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생산'이라는 영역을 안전한 '소도(蘇塗)로 삼아 튼튼한 정당화의 논리 속에 숨어버린 '자본'을 끌어내어 다시 이론적 메스 아래에 놓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2부에서 토스타인 베블렌(Thorstein Veblen)의 저작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자본은 생산이 아닌 생산에 대한 지배 권력'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 베블렌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독자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칼 마르크스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이상으로 급진적인 자본주의 비판 이론을 전개했다.* 그는 자본이란 사실 생산 그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생산에 투입되는 물질 자재와 장비에 대한 '소유권'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특히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 자본가들이란 생산 과정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지식도 없이 그저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동화된 소유권을 손에 쥔 '부재 소유자' (absentee owners)가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산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저 소유권만 쥐고 있는 자본가들은 어떻게 해서 '이윤'을 얻게 되는가? 베블렌의 표현을 빌자면, 소유권이라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자신이 소유한 생산 수단과 장비를 생산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빼내어 사회적 생산 과정에 '깡판' (sabotage)을 놓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자신들에게 만족할 만한

* 베블렌의 이러한 급진적인 자본주의 비판은 그가 죽은 후 대부분 묻혀져 버리고 말았고 오늘날 그는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유한 계급론' 같은 책을 쓴 사회학이나 인류학의 이색적인 학자로만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가 10권이 넘는 저작 속에서 일관되게 해명하려했던 이론적 주제가 '자본은 사회적 생산을 파괴하여(sabotage) 이윤을 취득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는 어떻게 전쟁, 공황 등의 고통을 겪게 되는가'였다는 점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베블렌의 자본 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은拙역, 『자본의 본성과 축적에 관하여』(책세상, 근간)를 참조.

이윤이 보장이 되지 않을 때마다 자신들의 소유권을 무기로 '효율성의 주 의 깊은 철회' (conscientious withdrawal of efficiency)의 권리를 유감없이 행사한다.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는 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다시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윤율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컨대, 사회적 생산 전체에서 볼 때 가장 중요성이 높은 병목에 해당하는 유형 무형의 장비들을 소유권이라는 형태로 '인질' (베블렌은 이것이 '자산' [asset]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한다)로 잡은 것이 바로 자본이다. 자본가들은 그를 통해 사회 전체의 생산을 '깡판 놓는' 인질극을 벌이게 되며, 이윤이란 바로 그를 통해 뜯어내는 몸값이 되는 셈이다.

결국 베블렌의 자본 이론에 따르면, 자본은 생산 그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사회적 생산 과정 및 거기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갖가지의 사회적 과정들에 대한 '지배 권력'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베블렌의 이론을 현실적 데이터와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자세히 검토한 뒤, 대기업과 금융자본주의라는 20세기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권력 자본론'의 뼈대를 제시한다. 나아가 루이스 머포드(Lewis Mumford)—베블렌의 가까운 제자였다—의 근대국가 분석을 또 하나의 영감으로 삼아 자본, 사회적 권력, 근대국가 등등의 문제들을 해명해 나간다.

3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적인 '권력 자본론'의 틀에 기반해 지배적 대자본들의 축적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증적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저자들의 독창적인 공헌으로 점차 알려지고 있는 '차등화 축적 이론' (theory of differential accumulation)이 그것이다. 자본 축적의 본질이 생산성이나 효율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배 권력에 있다고 한다면, 대자본은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식의 '이윤 극대화' 따위와는 전혀 다른 원칙으로 행동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

다면 대자본들의 스스로의 실적(performance)을 평가하고 목표로 삼는 행동 원칙은 무엇인가? 저자들은 다른 자본들의 평균적인 실적을 벤치마킹해 그것을 상회하는 것, 즉 '평균을 능가하는 것' (beating the average), 즉 '차등화 축적'이 그 행동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 경험과 데이터를 돌아볼 때에, 그러한 '차등화 축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배적 자본이 취했던 주요한 방법은 대규모의 인수 합병과 큰 폭의 가격 상승이라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한다. 여기서부터의 논의에서 자본 축적은 지구화, 전쟁, 유가 상승과 같은 최근의 지배적인 현실적 쟁점들과 구체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에서 저자들이 조심스럽게 21세기의 지구를 예측하고 있다. 어쩌면 지구적 규모의 스테그플레이션과 전쟁, 혼란이 주된 경향으로 나타날 것 같다는 전망으로 책은 끝나고 있다.

저자들의 저서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srael* (London: Pluto Press, 2002)은 자본의 본질을 다룬 이론 부분과 이스라엘 정치 경제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초고의 이론 부분은 상당히 자세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지면 편집의 사정 때문에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옮긴이는 닷잔 교수에게 그 이론 부분의 원고를 편집 이전 원래 규모 그대로 원본으로 삼아 한국에서 출판하자고 제안하였다. 저자들은 흔쾌히 응하고 그 초고를 다시 몇 번에 걸쳐 수정하여 이 책의 원본을 새로 구성하여 넘겨주었다. 그래서 이 책은 영문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한국어 본이 '원판'이 되는 셈이다.

그러한 사정을 통해 나온 책이기 때문에, 본서는 이론적 논의에 주된 방향이 맞추어져 있고, 그 「권력자본론」에 입각한 구체적 현실 분석의 사례가 빠져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어 자본 축적, 국가 형성, 전쟁과 지구화 등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위의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srael」을 참조하시기를 권하고 싶다. 또 저자들의 홈페이지 <http://www.arts.yorku.ca/politics/nitzan/bnarchives/index.html> 를 방문하면 여러 구체 사례 분석의 논문들을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한국어 판을 준비해 준 저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신고전파 경제학계는 물론 마르크스주의 진영을 포함한 기성의 어느 학파와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본과 권력에 대한 독자적인 비판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매진해왔다. 저자들의 만류로 인해 이 자리에서 자세히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에서 권위주의와 배타주의에 찌든 서구 경제학계와 이스라엘의 반동적인 사회 체제에 의해 겪어야 했던 저자들의 고초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조나단 닛잔은 캐나다의 대학에 최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심손 비클러는 예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아직 여섯 개의 시간 강사직을 뛰어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책으로 한국의 독자들에게 그들의 피땀어린 작업 성과를 조금이라도 더 널리 소개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두 사람에 대한 빛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다.

공부도 능력도 부족하고 또 감히 번역 따위의 시간적 '사치'를 꿈꿀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옮긴이도 어쭙찮은 책임의식 같은 것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기획이 토론토의 차갑고 뿌연 겨울 하늘 아래에서도 스러지지 않고 결국 출판으로 꽃망울을 틔우게 된 것을 보니 다시 힘이 솟는다. 그 동안 항상 곁에서 서로 지켜주었던 요크 대학 정치학과 박사 과정에 있는 박형준, 김낙중 두 동학의 도움을 기억하고 싶다. 또 한 없는 참을성으로 원고의 지체를 기다려준 삼인 출판사에도 사죄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부디 이 책이 학술 서적으로서가 아니라 지구화 시대에 어떻게 실천 방향을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들 모두가 함께 읽는 '대중 서적'이 되기를 바란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는 구절이 점점 가까이 와닿는 지금, 함께 사는 세상을 준비하는 일은 용당 모두 함께해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5월, 오사카에서

홍기빈

1부 수수께끼의 존재, 자본

…… 우리의 과학이란 요리책과 똑같다. 이 책이 제시하는 것은 첫째 요리의 '정통적' 이론으로서, 그 권위가 공인된 바 있으니 감히 건방지게 질문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들어가는 재료와 그 양의 목록인데 이 또한 우두머리 요리사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감히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1장 출발점: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

정치경제학이 "시민 사회의 해부"(Marx 1859: 20)라는 마르크스의 말은 곧 정치경제학이란 풍요의 획득과 권력 추구라는 두 가지를 연결시키려는 시도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두 가지를 연결시킨다는 말은 결국 그 두 가지가 애초에 별개의 것이라고 가정하는 셈으로, 권력과 물질적 행복을 별개의 두 가지로 구별하는 것은 사실 근대 사회 사상의 기본적 전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양분법의 기원은 18세기 후반 산업 자본주의가 출현하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전파 정치경제학자들은 구체제(*ancien régime*)에 반대하면서 힘을 키우던 부르주아 계급의 편에 서서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널리 퍼뜨렸다. 그들이 노리던 바는 원래 가족, 공동체, 국가 등의 제도에 묻어 들어 있었던(*embedded* Polanyi 1944) 시민 사회를 분리시켜 내는 것이었다. 최초의 중요한 자본주의 예언자였던 아담 스미스는 자유 시장이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이며, 그러한 메커니즘이야말로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그냥 내버려두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자유 방임을 요구하는 합성은 곧 생산과 물질적 행복

을 탈정치화시키라는 함성이 되는 셈이다.

이리하여 스미스 이후로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수직적' 영역과 '수평적' 영역이라는 두 가지로 분리하는 것이 점점 관습으로 정착되었다. 수직적 차원은 권력, 권위, 명령, 조종, 불화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학문상으로는 정치학의 영역에 속한다. 다른 한 축인 수평적 차원은 개인의 물질적 행복, 자유로운 선택, 교환과 균형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며 경제학자들의 관심 영역이 된다.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이 두 개의 영역이 본질적인 모순 관계에 있으며, 특히 정치적 과정이 경제적 과정에 '개입'하려 들고 그로 인해 자원 배분의 왜곡, 비효율과 물질적 행복 감소 등의 결과가 나타날 때에 그 모순이 두드러진다고 본다.¹⁾ 이들과는 반대로 급진적 정치경제학자들은 정치학과 경제학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일한 사회적 과정의 상호 연관된 부분들로 이해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들 또한 권력과 물질적 행복을 근원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활동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맺어주려 애쓰는 두 영역의 결혼도 본래부터 위태위태한 것이다.

정치학과 경제학을 갈라놓는 바람에 맨 먼저 희생된 것은 자본에 대한 이론이다. 학문 세계에서의 분과 학문의 분리로 인해 자본 이론은 경제학자들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되고, 정치학자·사회학자·인류학자들은 사실상 발언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 결과 자본의 물질적 측면의 고찰만 너무 강조되고 권력의 측면은 거의 전적으로 무시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게다가 그렇다고 자본이 명쾌하게 설명된 것도 아니다. 경제학자들

1)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들은 케인즈의 저서(Keynes 1936)를 따라 좀더 현대적인 접근을 취하여, 경제가 바보스럽게 작동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일정한 개입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하지만 그런 개입은 정치 경제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가 아니라 시장이 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하기 위해 바깥에서 안으로 작동하는 수단이라고 간주된다.

은 자본 개념의 논의를 독점해 놓기만 했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여전히 규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본이 화폐의 모습을 띤 부(富)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것을 증식시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훨씬 대답하기 어렵다는 게 드러났다. “경제학자들이 자본이라는 말을 현명하게 그저 화폐적·회계학적 의미로만 쓰는 데에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공연히 그 의미를 ‘근원적으로 해명’하려고 나서는 바람에 우리는 혼동에 가득찬, 소용도 없는 아주 어리석은 논쟁에 휘말려들고 말았다!”라고 슈페터는 말한다.(Schumpeter 1954: 323) 물론 “근원적으로 해명”시키려는 바람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파고들어 간 방향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축적을 생산성에다가 연결시키는 것이었지만, 사회적 생산은 갈수록 복합적인 것으로 변해갔기에 그런 연관을 포착해 내는 일은 점점 어려워졌다. 게다가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완전히 자기들만의 영역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은 더 어려워졌다. 블리스(Bliss 1975: vii)에 의하면, 경제학자들이 자본 이론에서만 일치를 본다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금세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자본이 혹시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면, 권력의 문제는 자신들 연구 영역 밖의 일로 치부해 버리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과연 그렇게 만장일치의 자본 이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

물론 예외도 있었고, 그 가장 주목할 만한 이는 칼 마르크스였다. 비판적인 정치경제학자였던 동시에 정치경제학의 비판자였던 마르크스는 권력과 생산이라는 두 가지를 출발점부터 나누지 않고 통합하려 하였다. 개인들간의 자유 교환이라고 하는 수평적인 걸모습은 단지 자본주의의 착취적·억압적 권력을 은폐하는 데에 봉사할 뿐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자본 축적으로 사회적 재생산 과정